

가금업계 “실효성 있는종축업 관리제도 절실”

**종계·부화장 등 무분별 난립...질병양산·수급불안 지적
정부 허가제 추진 이목 집중**

2008년에 이어 2년 만에 충남 천안의 종오리 농장과 익산의 종계장에서 HPAI가 발생함에 따라 가금업계가 공포에 휩싸였다.

이러한 가운데 보다 실효성 있게 종축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다시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종계 및 종오리농장들이 축산법을 위반하고 등록되지 않은 종계나 종오리에서 알을 생산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벌규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 같은 여론은 이번에 HPAI 발생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제기됐지만 이 전에도 이 같은 요구는 지속돼 왔다.

양계업계에서는 종계·부화장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종계·부화장 무질서하게 난립됐고 이로 인해 질병양산, 수급불안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며 관리감독 강화차원에서 허가제 전환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허가제 전환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에 해당한다며 반대해 업계의 이 같은 요구가 번번이 무산돼 왔다.

오리업계 역시 같은 의견이다.

이번에 발생한 천안의 종오리 농장의 경우 오리협회에 종오리 등록은 물론 검정도 받지 않던 농가로 오리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또 지난 2008년 HPAI 발생 당시에도 일부 종오리농장이 역학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하면서 질병을 오히려 확산

시키길 수도 있었다며 처벌 기준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특히 수급불안 해소와 국내산 오리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검정을 거친 종오리에서 생산된 새끼오리를 이용해야 하지만 최근 오리가격이 오르면서 F1오리에서 생산된 새끼오리가 양산되면서 시장 질서를 흐트러트리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오리업계는 반드시 F1오리는 근절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종축업 관리 기준을 보다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가금업계가 종축업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이번 구제역과 HPAI를 계기로 축산업 등록제를 강화해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축산업등록제가 어떻게 변할지 축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축산신문·이희영, 노금호 기자·2011.1.5

전북도,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방역비 15억 확보

전북도는 지난해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시작한 구제역과 구랍 29일 전북 익산시 망성면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비로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구제역 예방 방역비로 10억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비로 5억원 총 15억원과 국비 30억원 확보분과 함께 6일 익산시 등 시·군에 긴급배정키로 했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이 내는 위험지역, 3~10km는 경계지역, 주요도로에 이동

통제소 1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전북 익산 닭 사육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지난 닭 17만수, 사료 108톤을 매몰·소각했다.

뉴스스 전주·유영수 기자·yu0014@newsis.com·2011.1.5

AI 비상...닭·오리 운반 전용 지정차량만 농장출입



▲전남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대책을 강화했다.

전남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닭, 오리 운반 전용 지정차량에 대해서만 농장 출입을

허용하고 방역초소 운영을 강화하며 종오리농장 긴급 예찰검사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닭이나 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 또는 가금의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으로 인해 고병원성 AI가 도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닭, 오리 분뇨를 농장 밖으로 이동하지 말 것을 농민들에게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또 모든 닭, 오리, 계란 등 운반차량은 시군에 신고해 각각 전용 운반차량 지정을 받고 차량에 '전용 운반차량 스티커'를 부착하고 차량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한 후 농가와 도축장을 출입토록 했으며 닭, 오리를 운반하는 차량이 방역초소를 통과할 때 관계자가 이를 확인토록 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추진해오던 구제역과 AI 방역대책을 한층 더 강화해 방역초소를 축산단지, 농가 밀집지역 등 총 152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시군 초소 운영 및 차단방역 소독약품 구입을 위해 총 60억 원을 추가 지원했다.

전남도 축산위생사업소도 AI 유입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도내 종오리 농장 등에 대한 긴급예찰검사에 나섰다.

지난달 31일부터 AI가 발생한 충남 천안 종오리 농장과 역학적 관련이 있는 도내 육용오리 농가 8호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추가로 조사된 역학적 관련 농가 7호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10일까지 6일간 도내 종오리 농장 37개소에 대해 AI 긴급 정밀 예찰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달 28일 해남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돼 철새도래지 10개소에 대해 방역 차량을 동원, 도래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있다.

뉴스웨이·신영삼 기자·psi032@naver.com·2011.1.5

해외여행 축산인 귀국 시 신고·소독·교육 필해야 농식품부, 법무부·관세청과 합동 검역 강화 시행

농림수산식품부는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관세청(세관)과 합동으로 공·항만 국경검역시스템을 강화, 1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외국을 방문, 여행한 축산인이 입국 시 검역기관에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했으나 새로 시행된 검역시스템에 따라 입국심사 과정에서 축산인은 자동으로 신분이 확인되며 특히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을 여행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독 및 방역교육을 필하도록 규정했다.

입국심사 과정에서 축산인으로 확인된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관이 세관신고서에 소독대상으로 표시하고 동물검역기관(수의과학검역원)으로 안내한다.

폐업 등으로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축산관계자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안내를 받아야 한다.

또 축산인은 가방 등 수화물을 찾은 후 공·항만에 상주하고 있는 동물검역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소독 절차를 밟은 뒤 검역관이 실시하는 방역교육 이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축산인 범주에는 축산농가를 비롯해 수의사, 인공수정사, 동물약품·사료 판매 영업사원, 운송차량 기사 등 축산현장 종사자 및 출입자가 포함되어 있다.

축산경제·한정희 기자·penergy@chukkyung.co.kr·2011.1.7

가금·계란운송차량 신고제 실시

농식품부 방역대책 일환...계란유통협회서 대행

닭·오리 가금운반차량과 계란운송전용차량은 모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랍 31일, 천안과 익산지역에서 발생한 AI 발생상황에 따라 가축전염예방법상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의거, 기존의 닭·오리 가금 운반차량 신고수칙에 더해 지난 2일부터 계란운송전용차량도 신고제를 운용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닭농장과 계란집하장, 계란판매장 등 모든 계란취급업소 전 운송차량을 망라해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따라 신고대행기관을 한국계란유통협회로 지정했다.

앞으로 한국계란유통협회(회장 강종성)는 전국의 모든 계란운송전용차량에 대한 신고를 받아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를 통해 각 시·군·구로 통보, 각 시·군·구에서는 계란운송전용차량 등록대장과 대조해 계란운송전용차량 지정 스티커를 발부하게 된다.

신고한 영업자는 발부된 스티커를 운전석 하단에 부착하고, 소독실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등의 방역수칙의무를 다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계란운송차량은 AI초소와 구제역초소 등 방제초소 이동시 이동제한을 당하며 농장출입도 전면 차단된다.

강종성 계란유통협회장은 "앞으로 계란운송전용차량과 영업자에 대한 철저한 방역수칙 홍보와 교육을 통해 AI 조기종식에 유통인들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노금호 기자·kumho1234@naver.com·2011.1.10

광주복구, 오리고기 소비촉진 행사 실시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오리요리의 거리서 점심식사



광주광역시 복구(청장 송광운)가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남지역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리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가져 눈길을 끈다.

11일 복구에 따르면 오리오

리의 거리에서 북구청 공무원 등 150여명이 오리요리로 점심식사를 하는 '오리고기 소비 촉진행사' 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오리 등 가금류의 소비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주민들에게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막연한 불안심리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오리고기 소비촉진 행사는 오는 14일까지 북구청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오리요리의 거리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북구는 이와는 별도로 북구청 홈페이지와 북소리, 반상회 등을 비롯한 오리고기 소비촉진 캠페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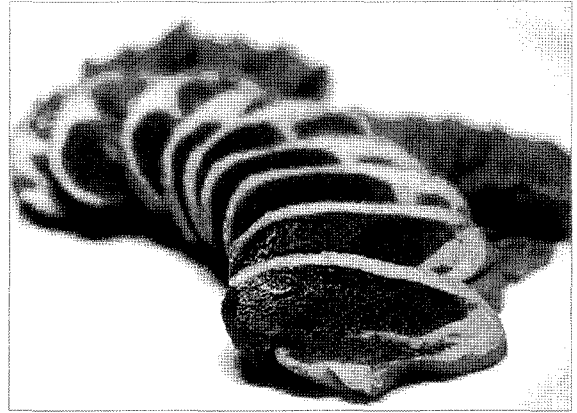
한편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섭씨 75°C에서 5분간 끓일 경우 전부 사멸하고 인체에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 심리로 오리, 닭 등의 섭취를 자제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오리고기 소비 촉진행사를 계기로 가금류에 대한 소비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 · 홍기철 기자 · honam3333@naver.com · 2011.1.11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등 백신 신규품목, 허가·심사 진입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백신 실용화지원 민·관실무협의팀」의 국내 백신 자급능력 확충 지원 사업에 힘입어 조만간 백신 2개 신규품목이 허가·심사 단계에 진입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 허가·심사 받게 되는 품목은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인 '성인용 디프테리아·파상풍 독소이드 백신 [Td(성인용)] ▲생물테러 대비용 '조류인플루엔자(AI) 백신' 등이다.

국내 3개 백신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 발족한 실무협의팀은 백신 개발 초기단계부터 개발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특성분석, 기준·규격 설정, 비임상·임상시험 설계, 진행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원료부터 생산 가능한 백신 품목이 27종 중 9종에 불과해 자립율은 33%에 그치고 있으나, 2015년 17종, 2018년 19종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일리경제 · 서진은 기자 · seo@kdpress.co.kr · 2011.1.18

파주 AI 규정위반 사료 먹여 감염

파주지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는 규정에 어긋난 잔반 사용에 따른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

결과, 파주의 신란계 농장이 음식물 찌꺼기(잔반)를 마당에 펼쳐 놓고 건조하는 동안 야생조류가 날아들었고, 이 야생조류의 분변이 섞인 잔반을 닭에게 쥐 AI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규정에는 잔반을 사료 원료로 사용할 경우 100도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 농장은 열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해당 농가를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도록 파주시에 통보했다. 열처리를 안한 잔반사료를 원료로 사용하면 사료관리법 3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AI가 주로 철새를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인일보·이종태, 김태성 기자·mrkim@kyeongin.com·2011.1.25

살처분 명목 보이스 피싱 기승

AI 발생 늘어나며 가금업계도 조심해야...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충남지역에서 축협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빈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5일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구제역 피해농가를 상대로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지급을 빙자해 통장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전화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제보가 자주 접수되고 있다는 것.

당진경찰서는 이에 따라 축협직원 사칭 구제역보상금 관련 전화금융사기에 속지 맙시다라는 문구로 생활안전협의회등 협력단체 회원 7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구제역 발생지역 부녀회와 노인정, 반상회장소 등을 찾아 전화금융사기 수법과 유의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또 길거리 전광판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구제역 보상금 관련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살처분 등으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가 또다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뉴스관리자·2011.1.25

